

EC의 자동차 공동 연구 사업 “DRIVE”

EC는 매년 5만 5,000의 사망자, 15만의 불구자, 170만의 부상자 피해를 냥고 있다. 환경 피해만도 연간 1조 에큐(1Ecu=1.14달러)에 이르고 있다.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도로 확장의 전망이 밝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자동차 증가는 4천만 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88년에 공동 연구 사업으로 “DRIVE(Dedicated Road Infrastructure for Vehicle Safety in Europe)”를 발족, 1억 2천만 에쿠스를 투입하여 72개의 개별 연구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금번, 사업의

시험 단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수익성, 시장 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첨단 기술을 총동원하여 ‘Smart Car’와 교통의 Infrastructure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첨단 Data Processing과 통신 기술을 이용, 최신의 자동차를 개발하여 교통 체계에 있어서도 도로 교통 사정에 따라 교통 정보를 서비스하는 가변 도로 표시 방법, 위성을 이용한 고속 도로 관리 체계, 디지털 교통지도 등의 개발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C, Tech-Europe, 91. 3.〉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과 그 파장

미국과 일본은 1986년 체결된 반도체 협정이 오는 7월 말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의 연장 및 내용 개정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수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4일 신협정 내용에 최종 합의하고 1주일 후인 6월 11일 정식 조인하였다.

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산 반도체의 일본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1992년까지 20% 이상 늘리는 사항을 협정 본문에서 명기한다. 2) 미·일 이외의 제3국 덤팡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이 제3국 정부에 대한 조사에 협력한다. 3) 협정 기간은 1996년 7월 말까지 5년 간으로 하되, 3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종결 여부를 판정한다. 4) 미국이 일본제 퍼스널 컴퓨터 및 각종 전동 공구에 부과하고 있는 100%의 보복 관세 조치는 철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합의 사항 중 외국산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 측정은 일본 통상 산업성 조사(MITI) 자료와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WSTS) 자료 등 두 가지 자료의 수치를 병용하고 그 차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1990년 말 현재 MITI 자료의 시장 점유율은 19.0%, 그리고 WSTS 자료는 13.2%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의 조정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일 간 신반도체 협정은 그 동안 미국 반도체 공업회(SIA)의 강경한 입장과 반도체 장치 소재 협회(SEMI)의 미·일 간 협력 체제 강화라는 상반된 의견이 맞서 대립되기도 하였으며 일본 업계 반응은 시장 점유율 20%에 대한 부담스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보복 관세 철폐라는 유리한 입장에서 미·일 양국 정부는 물론 미·일 업계가 상호 공존의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상당히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일 간 협조 체제의 환경 변화는 앞으로 한국 등 제3국의 덤팡 문제가 발생될 때 상당히 불리한 여건의 한 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EC가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포함되는 다자간 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바야흐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시장 개방 압력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의 미·일 협조 체제의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日, 日經/日工, 91. 6. 4~7〉

기술 예측 및 평가에 관한 관심 고조

첨단 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와 기술의 향방에 관한 정책적 연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국회의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를 모형으로 한 새로운 기술 평가 기관의 설립이 일본 학계와 산업체에서 요청되고 있다.

「조화로운 지구 사회의 건설을 위한 기술 및 인간 복지에 관한 전의」는 일본의 저명 인사 70인들의 2년에 걸친 연구 결과로 마련되어 일본 정부에 제출된 것이다.

이 건의서는 국가의 대형 기술 개발 사업이나 국제 공동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한 사전 평가,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등의 독립된 수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건의는 그 한 예로 일본이 개발한 원자력선 'Mutsu'를 제시하고 있다. '무쓰'

는 20년의 개발 기간과 10억 달러의 비용을 소모하여 겨우 수일 간의 시운전 끝에 고철로 폐기되었던 사례이다. 또한 미국과 공동으로 하게 될 초전도 입자加速기(Superconducting Super Collider : SSC) 개발 사업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평가에 대한 정책 당국의 관심은 유럽 각국에서도 점차로 고조되고 있다.

영국의 POST(Parliament Office of S&T, 1989 설립)도 학교 교육에서의 컴퓨터의 역할, 국방 연구 개발과 공공 연구의 재원 배분 등의 문제를 심층 평가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완료하였다.

도이칠란트 의회는 1990년 6월 TAO(Technology Assessment Office)를 설립하여 연간 2,500만 달러의 예산으로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Nature, 91. 12〉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에 대한 미국 기업의 강력한 경고

미국 소프트웨어 사업자 연합은 소속 5개 사가 한국의 두 기업을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및 사용으로 한국 검찰에 최초로 고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87년에 제정된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 금지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미국 사업자 연합회는 전세계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 외국에서 행하여진 미국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로 인하여 미국의 기업이 입은 손실이 연간 100~12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체는 미국 정부에 대하여 외국의 불법 복제·사용을 무역 협상의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협회는 또한 대만의 2개 사와 유럽의 3개

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럽 및 홍콩 소재 기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온 이들은, 평균 65%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봉쇄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 주재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기업 활동도 주요한 타겟으로 부각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체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는 발전되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장래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경고하는 것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 91. 5.25〉